

‘백남기 특검안’ 정국 뇌관으로 부상

야권 상설특검 1호...본회의 직행 표결 추진

여당 “법사위 안거치면 3차 파동” 강력 반발

‘백남기 상설특검 요구안’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권이 지난 5일 ‘백남기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본회의 직행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를 거치지 않는다면 ‘3차 정세균 파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

특검 요구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경우 여소야대의 현실에서 야권의 공조로 통과될 확률이 높지는 반면, 새누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로 들어갈 경우, 야권의 인원 미달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법사위 제적 위원 1/3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90일 동안 심사 기간을 거치며 법사위에 계류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 사무처는 (특검안에 대해) 일반 의원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야당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진하는 엉뚱한 꾀를 늘어놓고 있다”며 “여야 합의와 법사위를 거쳐 특검 실시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무처 유권해석을 뒤집고 또다시 야당의 입장에서 국회법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북 핵 위기, 경제 위기에다 태풍 피해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 권력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힘자랑에 골몰하고 있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하지만, 더민주 등 야권에서는 특검 요구안이 곧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민주 박원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요구안은 절차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 유권해석과 별도로 본회의 처리와 법사위 처리 방안 모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특검안의 본회의 직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의 정치적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안 직권상정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개회사 파동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논란을 겪은 상황에서 직권상정에 나서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백남기 상설특검의 필요성을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본회의 직행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새누리당과의 정치적 협상 가능성도 열어 놓는다는 전략이다. 야권 관계자는 “쌀값 폭락에 농심의 분노가 크다”며 “새누리당도 일방적으로 백남기 특검 보이콧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文 싱크탱크 출범...野 대선 레이스 점화

안철수·손학규·박원순·안희정도 곧 가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출범함에 따라 야권의 대선경쟁이 조기에 불이 붙는듯한 분위기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발기인으로만 500여명의 대학교수가 참여할 정도의 대규모로 출범하면서 야권의 인재풀을 상당수 선점해버리자 다른 대선주자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1년 2개월여 남았지만 야권에서는 일찌감치 대선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준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권 교체를 넘어 경제 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 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전 대표의 행보는 대세론을 굳히기 위한 적극적 행보로 풀이된다. 또 본선에서 표의 확실성에 대한 정치권의 의구심을 일찌감치 해쳐나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이에 경쟁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월 자신의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진 등 조직을 개편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

표는 격차해소와 평화통일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는 이차령 정책 라인에 공을 들이면서 오는 16일 광주에서 열리는 당원행사에 참석하는 등 보폭을 넓힐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기존에 서울시정에 조언을 해주던 전문가 그룹 100여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문 전 대표 쪽으로 옮겨갔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국감이 끝나는 대로 이날 말부터 지역 강연과 해외 출장 등을 통해 대권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연말 대선 출마 계획을 구체화할 경우 싱크탱크도 함께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더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직 싱크탱크나 전국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을 탐피하고 내달부터 ‘강연정치’로 대중과의 접촉면을 늘릴 계획이다. 정계 복귀 선언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도 기존 싱크탱크인 동아시미래재단의 재가동에 들어가며 분야별 정책 입안 작업도 본격 착수했다. 복귀와 맞물려 책도 나올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퇴원’ 이정현 현장행보

오늘 순천·곡성 방문

단식 농성 후 나흘째 입원해 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6일 퇴원,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행보를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지난달 말 동해에서 한미 연합작전 중 순직한 해군 링스 해상작전헬기 조종사 등 순직 장병 3명이 안장된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후에는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울산으로 이동, 울산 지역의 정갑윤·박맹우 의원, 김기현 울산시장 등과 함께 피해 지역을 돌리보고 주민들을 위로한 데 이어 역시 태풍 피해 지역인 부산과 경남 양산을 차례로 방문하는 등 하루종일 바쁘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태풍 피해가 가장 심각한 울산시 중구 태화동 태화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울산 침수지역을 둘러보니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은 것 같다”며 “정부 가용 예산을 빨리 투입해 복구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부산으로 이동,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새누리당 부산시당에서 긴급 당정 현장회의를 개최해 피해 복구대책을 논의했다. 그는 이날 양산의 마을회관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인 7일에는 제주 태풍 피해 현장을 들렀다가 오후에 지역구인 순천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모처럼 곡성 고향집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당당 의사가 며칠 더 입원 하길 권고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 대표의 뜻이 워낙 강해서 현장 일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정현 태풍 피해 주민 위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태풍 차바의 피해를 입은 울산시 중구 태화종합시장을 돌아보며 피해상인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새 비대위원장 28일 선출

국민의당이 오는 28일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의 뒤를 이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6일 결정했다. 신임 비대위원장은 12월 말께로 예상되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까지 2개월 동안 당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제개정이 마무리돼 박 위원장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어 “2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그 주 내에 당 중진들의 의견까지 모두 취합, 2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임 비대위원장 선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임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해 그는 “완전히 열어놓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는 것은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데 대한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총선 홍보비 파동 등 당의 비상 상황이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의원의 오도 오는 12월 대표 경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국정원이 대통령 복덕방 노릇”

퇴임 후 사저 예산 67억원 확보 역대 최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대통령 사저 논란과 관련, “왜 국정원에 부동산 업무, 복덕방 노릇을 또 시키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보위기를 주장하면서 대북업무에 전념해야 할 국정원에게 대북 업무를 돌려야 하기에 부동산 복덕방 노릇을 하라고 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고리 권력 중 한 명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외근 요원에게 지시해 박 대통령의 사저를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하고 관련 법에 따라 현재 경호실과 국정원 등 유관 기관 간에 보안·경호 등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또 “사저는 퇴임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준비하게 돼 있다”며 “금년 예산 49억 5000만원이 청와대에 이미 확보되었고 내년도 예산 18억여억원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많은 67억 6700만원을 사실상 예산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담당자가 외근부서에서 내근부서로 옮겨갔고, 국정원은 손 뺐다고 연락이 왔다”며 “가득 말하지만 국정원이 이명박 대통령 때 내국동 사저에 개입해 제거 원대 대표 시절 특검으로 끌고가 처벌받았지 않았나”라며 “경호실장이 처벌을 받았다. 정당한 업무를 합법적으로 하라”고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